

# 생산·판매 줄고 노조관계 악화... 완성차업계, 위기감 고조

**르노삼성** 노조 무기한 총파업 결정  
부분직장폐쇄... 일반 노조원 근무  
**한국지엠** 노조 소득분배 개선 요구  
반도체 공급부족 등 경영 압박 커져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 전경.

국내 자동차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의 판매량이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량용 반도체 부족으로 생산량까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노조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조합은 지난 4일 무기한 총파업을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기간을 정해놓고 파업을 진행하던 것과 달리 무기한 파업 선택은 르노삼성의 노사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동차업계에서는 XM3 유럽 물량 등을 다른 르노 공장에 뺏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르노삼성의 부분 직장 폐쇄는 지난해

1월 이후 1년 5개월여 만이다. 임단협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서 노조가 꺼내던 파업 카드가 반복되고 있다는 의미다.

앞서 르노삼성 노조는 임단협에서 기본급 7만1687원 인상과 격려금 700만원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기본급 동결과 순환 휴직자 290여 명 복직을 제시했으나 노사간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이후 노조는 서비스 직원 사무소에 대한 운영 중단을 철회하라고 했고, 사측은 운영상 효율을 이유로 사업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다만 르노삼성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일반 노조원들은 공장 가동에 동참하는 등 피해 최소화해 나가고 있는 상태다. 실제 지난 4일 노조의 전면 파업 지침에도 부산공장 직원 중 약 80%(약 1500명)가 출근해 근무를 했다.

그러나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르노삼성은 최악의 상황을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르노삼성은 지난해 3월 부산공장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던 닛산 로그 위탁생산 종료 후 본사로부터 후속물량을 받지 못하며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르노삼성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 2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으며, 290명에 대한 순환 휴직도 추진했다. 적자가 누적된 AS 직영사업소 중 일부를 운영 중단하며 노조와의 갈등도 깊어진 상태다.

르노삼성은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서 9344대의 완성차를 판매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8.6% 감소한 수치다. 내수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50.4% 감소한 5466대, 수출은 87.2% 증가한 3878대를 각각 나타냈다.

한국지엠도 비슷한 상황이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생산량 조절에 나선 한국지엠은 올해 임단협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지엠 노조가 생활임금 보장과 노동 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기본급 9만9000원 정액 인상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로 판매가 급감한 가운데 생계비 보전과 격려금까지 요구하고 있어 사측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

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도 경영 상황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국내 완성차 업체 중 반도체 영향을 받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 2월부터 부평 2공장을 50%만 가동하고 있다. 지난달 19~23일에는 부평 1, 2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동안 정상가동해온 창원공장도 이달 들어 50% 감산에 돌입했다.

이같은 영향으로 한국지엠의 지난달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5.4% 감소한 2만1455대에 그쳤다. 내수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8.4% 감소한 5470대, 수출은 27.5% 감소한 1만5985대로 각각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르노삼성과 한국지엠이 반도체 대란과 노사갈등으로 힘겨운 시기를 맞을 것"이라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매년 임단협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노사 갈등 요인을 풀고 생산성을 높일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1면 'LTV 완화해도...'서 계속

## 이더리움, 일주일새 30% ↑... 5000달러 신고가 넘는다

**베를린 하드포크 성공적 마무리**  
단점으로 지적받던 가스비 절감  
해외선 이달안에 5000달러 전망도



대표적인 알트 암호화폐 이더리움 가격이 400만 원을 돌파한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이더리움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주춤한 틈을 타 가상화폐(가상자산) 시총 2위인 이더리움 가격이 400만 원을 넘어서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5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 기준 이더리움은 420만 원에 거래 중이다. 이더리움은 최근 일주일새 30% 넘게 상승했다. 시황 중계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같은 시각 글로벌 거래 가격도 3370달러(약 379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이더리움은 200만 원대 후반에서 300만 원대 초반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 종가 기준 ▲1일 341만 원 ▲2일 351만 원 ▲3일 381만 원 등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지난 4일에는 400만 원 고지를 넘어섰다.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이 며칠째 주춤한 틈에 이더리움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300만 원 가량 상승하면서 3%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그 사이 비트코인도미넨스(시가총액 점유율)도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50% 밑으로 떨어진 뒤 이날 46.1%를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더리움 강세의 배경으로 '글로벌 은행들의 이더리움 활용'과 '네트워크 업데이트의 성공' 등을 꼽는다.

최근 유럽투자은행(EIU)은 이더리움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기 2년의 1억 유로(1343억 원) 상당의 디지털 채권 발행을 결정했다.

또 미국 투자은행 JP모건도 자체 가상화폐인 JPM코인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행하면서,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활용해 400여 개 글로벌 금융기관을 연합한 글로벌 금융 플랫폼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이더리움은 '디지털 플랫폼'의 성격이 강조된 가상화폐다. 문제는 플랫폼 이용에 필요한 가스비(수수료)가 과도하게 책정될 뿐 아니라 처리속도가 느리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받아 왔다. 그러나 지난달 진행된 네트워크 업데이트의 일종인 하드포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원은 "4월에 진행된 베를린 하드포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온 가스비가 크게 절감됐다"며 "오는 7월 예정된 런던 하드포크마저 성공한다면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NFT(대체 불가능 토큰)와 디파이(DeFi) 등이 주목받으면서 이더리움 생태계 확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더불어 해외에서는 이달 안에 개당 거래 가격이 5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금융 컨설팅업체 드비어그룹 창업자인 나이젤 그린은 지난 3일(현지시간) 마켓워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더리움은 폭증하는 가상화폐 시장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라며 "일주일 내 5000달러에 도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

**고소득자만 웃는 DSR규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와함께 연소득과 주택가격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존의 부부합산 연 소득은 현재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주택가격요건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선 지 오래된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LTV 규제 완화...효과 '글썸'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작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은 LTV 완화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한도를 계산해 보면 연 소득 3000만 원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살 경우 LTV 50%를 적용 받아 3억 원까지 대출(금리 2.5%, 30년 분할상환, 다른 대출 없는 경우로 가정)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추진대로 이 비율을 60%까지 올리면 대출한도는 3억 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DSR 40% 규제가 시행되면 총 대출 가능금액은 1억 6000만 원이다. LTV가 확대되더라도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연 소득 8000만 원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 현재 3억 원(LTV 50%)에서 3억 6000만 원(LTV 60%)로 한도가 늘어난다. 다만 이 경우 DSR 40%가 적용되면 6억 7000만 원까지 한도가 확대돼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늘어난다.

연소득 1억 원 무주택자도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사는 경우 현재 2억 4000만 원(LTV 40%)만 원에서 3억 6000만 원(LTV 60%)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또 DSR 40%를 적용할 경우 대출한도는 8억 4000만 원이어서, 주택담보대출외에도 신용대출 등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 빠른 정산... 수수료인하... 상생으로 '윈윈'

>> 1면 '反쿠팡' 이커머스... 서 계속

다양한 판매자가 입점하는 오픈마켓 특성상 우수 판매자를 유지하면 구매자의 만족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기 마련이다. 소비자 만족은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입점 판매자와 오픈마켓 사업자 모두 윈윈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수수료 정책 외에 판매자 친화 경영으로 빠른 정산을 펼치는 곳도 있다. 11번가는 지난해 10월 업계 최초로 '빠른 정산'을 도입했다. 상품이 고객에게 배송완료된 다음날 판매자에게 정산금액의 90%를 먼저 정산하는 것. 기존에는

구매확정 다음날 100% 정산하는 방식이었으나 고객이 직접 구매확정을 하지 않으면 배송완료 8일차에 정산이 된다는 점을 고려해 정산 시기를 일주일 앞당겼다.

이베이코리아도 대금정산 속도를 단축했다. 이베이코리아가 운영하는 G마켓과 옥션에서 빠른 배송 서비스 '스마일배송' 이용 시 상품 출고일 다음 날 정산해주고 있다.

빠른 정산은 중소 판매자들의 자금회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장 환영받는 정책이다. 위메프는 월정산과 주정산 제도를 운영중이다. 주정산 제도

는 특가 딜이나 신규 입점 판매자에게 적용한다. 원활한 자금 순환을 위함이다.

반면 쿠팡은 판매대금을 정산받기까지 최대 60일까지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온라인몰의 정산을 30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로켓정산법'이 발의되었을 정도다.

여기에 최근 '아이템 워너' 제도도 판매자들의 원성을 자아냈다. '아이템 워너' 제도는 동일한 상품을 가운데 가장 싸고 평가가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제도다. 이 과정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판매자가 동일한 상품 판매자의 상품 상세정보나 리뷰 등을 가져다 쓸 수 있어 지적을 받았다. 이를 두고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쿠팡의

'아이템 워너' 제도가 판매자간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기만해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마켓은 다양한 판매자들이 입점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만큼 판매자 유치도 중요하다. 늦은 정산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이템 워너' 제도는 향후 쿠팡을 이탈하는 판매자들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다.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꾸준히 해당 플랫폼에서 구매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수 판매자들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판매자들과의 상생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판매자들이 이탈하기 시작하면 소비자들의 구매도 끝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